




| | | | | | | | |
|---|---------------|----------------------|---|--|--|---|--|
|  해양수산부 | | 보 도 자 료 |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
| | | 배포 일시 | 2021. 7. 24.(토) 총 3매(본문 2, 붙임 1) | | | | |
| 담당 부서 |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 담 당 자 | • 과장 신재영, 사무관 박솔잎, 주무관 김재훈 - ☎ (044)200-5160, 5163, 5164 | | | | |
| 보 도 일 시 |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 | | | |

「항만안전특별법안」,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항만안전특별법안」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만안전특별법안」은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다. 항만은 하역·줄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 안전점검관 도입, 항만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제도들을 규정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항만하역사업자는 소관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항만 안전점검관은 상시적으로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해적에 피랍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었던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은 우리나라 국적 선박 및 해당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뿐 아니라,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우리나라 선원에게도 적용^{**} 된다.

* 기존 해적피해 위험해역 내에서 해적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아 통항·조업 등이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역

** 다만 긴급한 구조를 위한 진입, 선원·승선자의 의사에 반하는 진입 등 해양수산 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이 법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 어선의 원양어업 허가 또는 어선 입출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해당 선박에 대한 선원 취업 주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제·개정안은 국가가 항만종사자와 선원의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법률안 | 주요내용 | 담당부서 |
|--------------|--|--------------------------------------|
| 항만안전 특별법안 |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관리 의무 및 항만하역사업자가 자체 안전계획 을 수립·이행할 의무 규정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이행여부 점검 등을 위한 항만안전 점검관 제도 도입, 항만별 항만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 항만운영과 (장기봉사무관, 044-200-5773) |
| 해적피해 예방법 | 해적피해 고위험해역 설정 및 선박·선원(외국어선에 승선하는 우리 국민 포함) 진입제한 , 해적피해 예방조치 점검 근거 마련 | 해사안전관리과 (최희동사무관, 044-200-5851) |
| 선박직원법 | 「해적피해예방법」상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벌칙이 확정된 선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 하도록 규정 | 선원정책과 (김지홍사무관, 044-200-5741) |
| 원양산업 발전법 | 「해적피해예방법」상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어선의 원양어업허가를 제한 , 원양어업을 정지 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입항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 | 원양산업과 (서민혜사무관, 044-200-5366) |
| 해운법 | 선박관리사업자가 「해적피해예방법」상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선박 등에 대해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선원정책과 (정상구서기관, 044-200-5747) |